보 도 자 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배포 일자	2026.11.10.(화)/ **총2매** (본문 1, 붙임 1)	
자료 제공	수산연구본부 수산정책연구실 정명화 실장(051-797-4571)	
배포 부서	성과홍보실(강자운 행정원 051-797-4396, 이선우 실장 051-797-4381)	
보도 일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www.kmi.re.kr		

외국인 어선원 확보, 단기 고용에서 숙련인력 양성·정착 중심으로 전환 필요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외국인 어선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결과 발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외국인 어선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발표하고, 국내 어선어업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어선원 정책을 단기 인력 확보에서 숙련인력 양성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어선어업은 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구조적인 인력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어가 인구는 2010년 약 17만 명에서 2024년 8만 3,963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으며, 2024년 기준 60대 이상 인구가 전체의 약 67%를 차지했다. 이에 외국인 어선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단기 체류와 반복적인 인력 교체에 초점을 두고 있어 숙련인력 확보와 장기적인 인력 운영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국내 어선원 수급 구조와 외국인력 고용제도를 분석하고, 농축산업·조선업 및 일본·뉴질랜드의 외국인력 활용 사례를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어선원 양성 중심의 정책 전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외국인 어선원 정착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과 복지, 교육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칭) 어선원의 근로기준 개선 및 복지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안했다. 특히 20톤 미만 어선의 내·외국인 어선원을 포괄하는 근로기준

을 마련하고, 해양수산부 내 전담조직인 ‘어선원과(가칭)’를 신설해 근로감독과 인력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인 어선원의 직무교육 확대, 숙련도에 따른 경력개발체계 구축, 지역한정 어업특화형 비자 도입 등 장기적인 정착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정명화 실장은 “외국인 어선원은 국내 어선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인력인 만큼 단순한 인력 공급을 넘어 숙련도 향상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어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어업 현장의 인력 수급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수산연구본부 수산정책연구실 정명화 실장(051-797-4571)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서 원문 URL https://www.kmi.re.kr/web/board/view.do?rbsIdx=384&ct_report_gubun=1&idx=1321

